

북미, 우라늄 농축 중단·식량지원 합의

6자회담 상반기 재개되나

비핵화 합의... 정부 "3차 남북 비핵화 회담 기대"

북한과 미국이 지난 23~24일 베이징에서 열린 3차 북미대화에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중단과 대북 영양지원에 합의함에 따라 6자회담이 상반기 재 개최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23~2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진행된 3차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를 지난 29일 밤 동시 발표했다.

북측은 미측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비핵화 사전조치'로 요구한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중단과 이를 감시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을 수용했다.

미측도 이에 연동해 우선 24만 규모로 대북 영양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지원을 위해 북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조병제 외교교통상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오늘 발표된 북미 합의 결과를 환영한다"며 "정부는 특히 북한이 그동안 한미가 6자회담 재개 여건 조성 차원에서 촉구해온 사전조치들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을 주목하면서 이러한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앞으로 6자회담 관련 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북미가 UEP 중단과 영양지원을 골자로 한 '빅딜'에 성공함에 따라 6자회담도 재개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수석대표회담에서 북핵 신고 내용 검증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 3년 이상 열리지 못하고 있었다.

6자회담 당사국도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6자회담 재개를 지지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이 비핵화 사전 조치를 취하면 6자회담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중국과 러시아 역시 조속한 회담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북미합의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이 성립되기는 했지만 세부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초'를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식량지원이 먼저나 UEP 중단이 먼저냐를 놓고 북미간에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미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선후관계를 놓고는 기술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를 언제 이행하느냐가 6자회담 재개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도 이날 "향후 북한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분석하면서 협의를 해볼 것"이라면서 6자회담 재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6자회담이 재개 절차로 들어간다면 3차 남북 비핵화 회담도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외교협력추진단장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6자회담 재개 과정에서 남북 비핵화 대화도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북회담 재개 의지를 드러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일본 정부에 대해 "군대 위안부 문제만큼은 여러 현안 중에서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인도적 문제"라고 촉구했다.

"위안부 문제 조속 마무리해야"

이대통령 3.1절 기념사 "피해자 생전 해결 못하면 기회 없어"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일본 정부에 대해 "군대 위안부 문제만큼은 여러 현안 중에서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인도적 문제"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양국이 진정한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평생 마음에 아픈 상처를 갖고 살아온 할머니들은 이제 80대 후반을 훌쩍 넘겼다"면서 "이분들이 마음에 품은 한을 살아생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와의 정상회담에서 위안

부 문제를 공식 제기한 지 불과 두 달 여만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다시 촉구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3.1 정신이 오늘날 더욱 빛나는 것은 위대한 '관용' 정신에 있다"면서 "무자비한 총칼의 진압에 평화롭고 단합된 질서와 위엄으로 맞섰다. 가장 힘없는 자의 이런 고귀한 행동이 전 세계 양심을 일깨웠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연단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연단을 하고 있다.

북미·북일 수교 추진...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도

민주, 대북정책 발표... 국회회담 특위 구성

민주통합당은 1일 '대북정책 3대 전략,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북미·북일 수교 등 남북한 4강 교차승인으로 한반도 냉전 질서를 완전히 해체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북정책 3대 전략은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한 4강 교차승인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중국·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북방경제시대 개

막 ▲동북아 협력 외교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6·15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 총괄 이행기구로 총리 회담을 가동하고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위해 국회 내에 남북국회회담추진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6자회담 재개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남북 군사관 리기구 구성을 통한 우발적 충돌 방

지, 군사 신뢰 구축, 군비감축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남북대화를 통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즉시 가동하고 국군포로와 남북자 송환도 추진한다. 또 정경분리의 원칙 아래 식량·비료·보건 의료 등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등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대북교류협력력을 허용하고 개성공단 활성화 및 제2, 제3의 공단 확충과 함께 대륙철도·아시아하이웨

이·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북방경제 3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강산·개성관광을 재개하고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한 국제관광특구 지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런 전략과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총선 이후 민주진보 정부 집권까지 추진할 한반도 평화전략 이행계획서를 조속히 마련하고, 집권 시 정부 차원에서 2013년 이후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민주 "기소청탁 의혹 나경원·김재호 수사하라"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및 불법 비자금 진상조사특위는 1일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박은정 검사에게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에 대한 기소를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 나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위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

검사의 용기로 기소청탁이 사실임이 드러났다"며 "나 전 의원이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내세워 기소청탁을 이어가한 나경수 주진우 기자를 고발한 건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나 전 의원과 김 판사를 허위사실공표와 무고 혐의

로 수사해야 한다"며 "특히 법원은 법관윤리강령을 어긴 김 판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박 검사에 대해 "선량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본연의 의무를 다한 것이 만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나

전 의원과 김 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편인 김 판사가 기소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기소청 사건은 애초 청탁을 할 만한 사안도 아니었다"면서 "이번 음해는 나꼼수, 시사인 등 편향된 단체의 정치기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독도 정상에 日 겨냥한 대포 있다"

민주 엄승용 후보 "문화재 지정 추진"

민주통합당 충남 보령·서천 국회의원 예비후보 엄승용(54·전 문화재청 정책국장) 씨는 "독도의 정상에 있는 대포(사진)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국민운동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 건의는 당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체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시됐으며, 정부는 독도 대표의 존재 사실과 문화재 지정을 위한 움직임 자체를 숨겨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이 건의는 당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체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시됐으며, 정부는 독도 대표의 존재 사실과 문화재 지정을 위한 움직임 자체를 숨겨왔다"고 주장했다.

이런해는 고물로 방탄막 대포가 독도 정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초로 공개된 것이다.

독도의 대표는 애초 1946년 미국에서 제작한 길이 50인치 함포로, 1978년 우리나라 해군이 인수해 사용



하다 경찰청이 1981년 인계받아 독도 정상에 설치한 것이라고 영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 대표로 1996년까지 사격연습을 해왔으며 지금은 남아 사용이 중단됐다. 당국은 이 대표를 철거하면 독도 정상의 연약한 지반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어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주)호남랜드 상무지구 시청앞 내강사광주전남지사유지빌딩 501 태양광발전소 건물 (지붕, 옥상) 임대 구함

대인동심일부동산 호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행복한 공인중개사 (세민군 변산반도 펜션 전문) 역포 원동, 펜션, 다세대주택 부지